

노인·주부 직업훈련 지원

고용촉진사업 개선

정부는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부·고령자·비진학 청소년 등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실업대책 위주로 운영돼온 '실업자 고용촉진사업'을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개편해 직업훈련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훈련수당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열린 중앙직업안정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촉진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앞으로 직업훈련의 방향을 실업대책사업에서 인력부족대책사업으로 바꾸어 고령자·주부들의 적합직종 및 시간제근로 적합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

또 최근까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 등에 비진학 청소년 및, 전역예정 장병 등을 취

업시키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까지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따른 수강료(월 5만원), 훈련수당(월 평균 5만1천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가) 급認可 92.1.8 東 亞 日

여성유휴인력 百47萬명

인력난 양면아 취업희망 15萬명 늘어

산업인력화가 가속화되면서 유휴인력이 1백5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일과맞근로주거 등이 맞지 않아 많은 여성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생산직에 여성인력이 흡수될 바라는 반면 여성들은 사무직과 전문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점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8월 중소기업중앙회의 韓基允연구원이 정부와 관련기관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중소기업 고용구조와 주부인력 활용대책」에 따르면 산업인력화가 가속화한 여성유휴인력은 1백47만명에 이른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 7백17만명중 18.4%인 1백32만명은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며 적극적인 취업희망을 희망하는 여성실업자도 15만명에 이른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부들이 유휴하는 이유로는 월평균 59만7천원으로 기업이 제시하는 37만1천원보다 60%가 높았다. 직무분야에서도 주부의 사무직선호가 48.1%로 가장 많고 전문직이 35.1%, 생산직이 11.7%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주부인력채용계획에 따르면 사무직은 4.3%에 불과하고 생산직이 95.7%를 차지해 주부의 사무직취업은 어렵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